

“지역 예산 1조원 시대 열 것”

한완수 도의원 임실군수 출마 선언 농업이 강한 임실 지역 자원 활용 등 9대 핵심정책 제시



한완수 전북도의회원이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임실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임실을 만들기 위한 9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완수 전북도의회(임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예산 1조 원, 연간 일자리 1천개 창출,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새로운 임실 119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인구소멸, 성장 정체 등 위기에 빠진 임실을 구하고, 새로운 활력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8년간 불통 행정이 이뤄지면서 임실군에는 편가르기, 출세우기, 불공정 등의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실천하는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공정한 임실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임실을 만들기 위한 9대 핵심 정책으로 ▲농업이 강한

임실 ▲모두가 우리 임실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밭갈마다 흥이 있는 임실 ▲함께 볼보고 키우는 사람, ▲여성이 서럽지 않은 효도 임실, ▲여성이 담당할 임실, ▲지역 자원의 현명한 활용 ▲소통과 공감의 참여행정을 제시했다.

한완수 의원은 “낙후된 임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의 예산 전문

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통해 임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4월에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회까지 소임을 다한 후 임실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정권마다 계획 바뀌는 새만금, 더는 안돼”

김희수 도의원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권에 따라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은 24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상징이자 미래인 새만금이 수십 년간 정권에 따라 난항을 겪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 윤석열 당선인의 구체적인 새만금 계획을 확인하고, 전북은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주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제 막 활력을 띠며 진행 중이다”라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한 전북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기

반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강조 ▲도민을 넘어 국민적 공감과 적극적 지지 확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과 권한 확보 등을 제안하며 “이제는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 추진계획에 총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관심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교차로 우회전 체계 확립해야”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이 24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교차로 우회전 관련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 차량 단속 강화 및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정보로 직진 신호 시 갈팡질팡하는 우회전 차량들이 줄줄이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였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정지하는 차량이 뒤섞이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에, 실제 개정법률

안이 시행되는 7월을 4달이나 앞둔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없다면, 교차로이지만 우회전하는 차량은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통행성 방향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우회전 관련 보조수단(교통심, 우회전 전용차선) 확대, ▲우회전 보조 신호 등 설치, ▲신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도민 삶의 질 향상·활발한 의정활동 공로’

강용구·김기영·박용근 이병도·최훈열·황영석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 김기영(익산4), 박용근(장수), 이병도(전주3), 최훈열(부안), 황영석(김제1) 의원이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 김기영(익산4), 박용근(장수), 이병도(전주3), 최훈열(부안), 황영석(김제1) 의원이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광역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용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다수 정비했다.

김기영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8건의 5분 자유발언과 2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소외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섰다.

박용근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비판

과 더불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자치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병도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건축자재보존 활용연구회 대표위원으로 도내 건축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확립 및 지역발전을 유도했다.

이 의원은 또,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을 주도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명예를 선양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최훈열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락농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탄소산업, 금융산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 등 전북 산업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황영석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환경 지원조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이끈데다 장애인가정의 행복을 위한 노력과 환경피해와 관련된 주민갈등을 조정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정책으로 대결하자”... 공명선거 제안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익산시장 선거에 관련해 네거티브 선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책으로 대결하자”는 취지의 공명선거 및 청정선거를 제안하면서 심층정책 5대(실버복지정책)를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익산을 미래병영의 도시로 만들고 익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인성을 두루 갖춘 참된 시장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포지티브 선거를 앞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저는 정책선거를 표방하면서 ‘심층정책 시리즈’를 선보여왔고 지난 14일 전북도의회에서는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 익산’을 주제로 큰 그림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연구원에서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면서 익산발전 위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예비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익산시장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자신의 향후 대응과 계획에 대해서도 짧지만 강하게 언급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심층정책 5대 ‘실버복지정책’으로 ▲실버잡센터, ▲리더워 사무장제도 ▲시니어문화지원, ▲실버스포츠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후원회 결성

전북 기록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인 이상규(전주시당하는 교회)목사와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후원회원들은 24일 ‘우범기와 함께 잘사는 전주’를 만들자며, 지지의 뜻을 밝히고, 후원회를 결성했다.

이 날 후원회장직을 수락한 이상규 목사는 “0·1지방선거는 쇠락해 가는 전주를 잘사는 전주, 돈이 되는 전주로 변화시키는 대장정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중요한 날”이라며 “그동안 전주시장 입지자들이 내놓은 공약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 후보야말로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잘사는 전주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예회장직을 맡은 김두관 의원도 우 후보를 지지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과 광주 경제부시장, 전북 정부부지사 등 역임한 우범기 후보야말로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예산전문가로서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의병 역사 재조명·기념사업 지원”

김정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교육위원회)의원은 24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병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전북의 역사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마다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 우리 전북”이라며 “이러한 의병 정신을 동학동민혁명, 일제강점기 항

일투쟁,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북에 의병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책 한 권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와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학술적 연구와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자립준비청년 취업률 제고해야”

나기학 도의원



나기학 도의원이 24일 제38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정규직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보호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적정 소득으로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북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다”면서 “반면, 가정위탁은 정규직 19명(67.9%), 비정규직 6명(21.4%)으로 취업형태에 따른 그 비율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설별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차등돼 있는 것은

아닌지, 자립지원담당위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학 진학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데이터 관리와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구축하라”고 요구하며 자립지원담당위원 확충도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부모 찾기 시스템 구축”도 요구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이병철 도의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전액 국비로”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24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국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50% 부담이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총 39억4,600만원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99.5%를 집행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대비 집행건수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생활지원비 신청자 10명 중 8명의 도민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이다.

최근 정부는 28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앞으로 전북도와 개별 시·군은 지방비 부담률 50%인 285억원을 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병철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 편성을 전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종식 도의원 “의료시스템

질적 향상 ‘간호법’ 절실”



현재 의료체계 미흡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조정을 마련하지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가의 의료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간호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행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법안이지만, 의사의 행위에 관한 법률에 치우쳐 간호사 역할과 그 경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 치료의 보조로 정의되고 있어, 간호사의 전문적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시대흐름에 따라 더 다양해진 영역에서의 간호사 업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어사다.

김종식 의원은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이제 병원만이 아닌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산후조리원, 학교, 회사, 어린이집 등 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서 간호사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그 업무의 범위 또한 명확히 확대·보강해야 함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미뤄오기만 했던 간호법 개정·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